

다자녀가정 기준 2명으로 완화

- 아기 키우기 좋은 양산 지향 -

1. 제안배경

□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. (2021 저출산고령위원회)

□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와 저출생 등으로 아이 셋 이상으로 하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.

□ 전국 17개 시·도 가운데 부산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15곳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된다. 다자녀가정 기준의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.

2. 현황

□ 현재 양산시는 관련조례에 의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.

□ 반면 인근 경남도나 창원시 등의 경우 다자녀가정 혜택에 대해 조례상 인원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. 경남도의 경우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등 다자녀 사업을 2자녀 기준으로 하고 있다.

□ 하지만 양산시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라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, 정부 지침이 바뀌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.

□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.

: 주요 보도자료

- 다자녀 지원 기준 2인 이상으로 낮춰야 (민생경제연구소)

- 돌만 낳아도 다자녀 시대 흐름 반영하는 지자체 (YTN)
- ‘둘째부터 다자녀’ 조례...저출산 극복 마중물 되나? (KBS)
- 내년부터 2자녀도 다자녀...양산시는 ‘아직’(양산신문)

3. 제안사항

-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련 조례 제2조(정의) 4. 개정